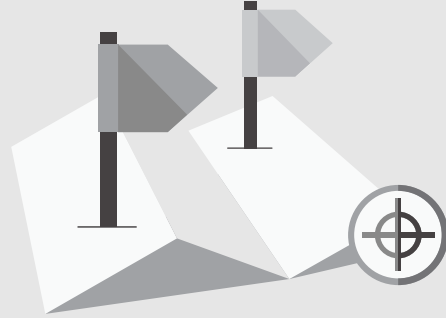


이달의 초점

가족, 세대, 인구 현상에 대한 인식



결혼 안과 밖의 가족 형성에 대한 태도

변수정

가족 기능 및 성 역할과 책임에 대한 인식

김은정

생애주기의 연령기준과 연령규범에 대한 인식

이윤경

세대갈등 및 생애주기별 정부 정책에 대한 국민 인식: 연령·계층 차이를 중심으로

남궁은하

인구 현상에 대한 인식과 함의

진화영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국민 인식 및 가치관 조사' 개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저출산·고령화의 인구변동 현상을 둘러싼 국민의 인식과 관련 가치관에 대한 심층 파악을 통해 향후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정책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국민 인식 및 가치관 조사'를 실시하였다. 이 조사는 만 19세 이상 성인 8,000명의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구조화된 설문(Tablet PC Assisted Personal Interview: TAPI)을 활용하여 총 130명의 조사원에 의한 1:1 면접조사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조사기간은 2020년 9월 11일~10월 22일이며, 전국 17개 사도의 801개 집계구에서 실시하였다. 주요 조사 내용은 1) 가족 및 가족 가치관과 관련하여 가족기능, 결혼과 가족 형성·구성에 대한 가치관, 2) 연령규범 및 세대 가치관과 관련하여 연령집단 기준에 대한 가치관, 연령규범과 연령차별 인식, 세대갈등에 대한 인식, 3) 인구 현상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였다. 이 조사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생명윤리위원회(URB: Institutional Review Board)의 심의를 거쳐, IRB 승인(제2020-63호)을 받아 진행하였다.

이번 호 이달의 초점, '가족, 세대, 인구 현상에 대한 인식'에 게재된 원고들은 이 조사 결과에 기초하여 작성되었으며, 2020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발간한 보고서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국민 인식 및 가치관 심층조사」의 내용을 일부 수정·보완, 재구성하였음을 밝힌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인구 현상에 대한 인식과 함의¹⁾



Social Awareness of Population Issues and Its Implications

진화영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원

2001년 이후 합계출산율 1.3명 미만의 초저출산 현상이 장기화되면서 한국 사회의 급격한 인구 감소 현상은 사회 전반에 걸쳐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 글에서는 2020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실시한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국민 인식 및 가치관 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한국 사회의 급격한 인구 감소 현상에 관한 국민들의 인식을 살펴봄으로써 향후 인구 절벽에 대한 원인과 대응방안을 중심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조사 결과에 의하면, 인구 변동이 본인의 삶에 미치는 영향은 출생아 수 감소(저출산 현상)보다 고령인구 증가(인구 고령화 현상)에서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정부에서 수행한 정책들의 효과성에서도 동일한 경향을 보였다. 그리고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인구 감소 현상과 수도권 인구의 집중화 현상 모두를 '다소 사회적 문제이다'라고 인식하는 경향이 비교적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인구 변동에 대하여 지속적인 진단과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완충제 역할의 '완화'와 '적응' 정책 간 균형을 유지함으로써 삶의 질 제고 차원에서 전 생애주기별 돌봄 및 소득보장을 위한 관련 여건을 조성할 것을 제안한다.

1. 들어가며

한국은 심화하는 저출산 현상과 빠른 고령사회로의 진입을 동시에 경험하고 있다. 2020년 말 기

준, 주민등록인구는 5182만 9023명으로 2019년(5184만 9861명)에 비해 2만 838명 감소(행정안전부, 2021)하였고, 1인 가구의 증가와 인구의 수도권 밀집 현상이 발생했다. 더욱이 사망자

1) 이 글은 이윤경 외. (2020).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국민 인식 및 가치관 심층조사』 보고서의 2장과 4장 내용 일부를 포럼 형식으로 재구성함.

수가 출생아 수를 초과하여 인구가 자연 감소하는 ‘인구 데드크로스(Dead Cross)’ 현상이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집계되며, ‘인구 절벽의 위기’가 점차 현실화되고 있다.

한국의 급격한 인구 감소 현상은 사회 전반에 걸쳐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개인의 가치관과 현실의 괴리가 존재한다. 출산, 사망, 이동에 의해 결정되는 인구 변동 현상은 미래 사회를 예측하고 대응하는 과정에서 주요 변수로 고려되며, 사회구조적 측면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인식 및 가치관의 변화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출생아 수 감소 현상은 국민들의 출산과 가족 가치관의 영향에 의한 결과로, 고령인구 증가 현상은 연령에 대한 사회 규범과 세대갈등의 인식과 가치관이 원인으로 작용한다.

인구의 자연 감소 현상 중 하나인 출생아 수의 급격한 감소는 저출산 기조를 형성하고, 고령인구 증가로 연결되어 궁극적으로 총인구 규모의 감소와 인구구조의 변화를 초래한다. 특히 생산가능인구의 감소로 인해 총부양비가 증가할 뿐 아니라, 국내총생산(GDP)이 위축되고 잠재성장률도 하락하여 국가의 성장동력을 잃게 되는 등 한국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할 가능성이 크다. 유소년 인구의 비중이 높은 삼각형 모습에서 20~30대 청년층의 비중이 높은 항아리 모습으로, 중장기적으로는 유소년 인구에 비해 고령층 인구의 규모가 비례해지는 역삼각형 모습으로 변화하며, 이는 지역 인구와도 연관되어 연령별 인구 피라미드 변화에 더욱 주목할 필요가 있다(이

윤경, 2021).

그동안 한국 사회의 관심은 지역 인구에 비해 출생아 수 감소와 고령인구 증가 현상에 상대적으로 집중된 경향이 있다. 수도권 인구가 비수도권 인구를 추월할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인구 유출로 인한 인구 불균형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다. 올해부터 시행 중인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21~2025)에서는 지역 인구에 새롭게 주목하여 지역별 인구 불균형과 수도권 인구 집중화 현상을 저출산 및 삶의 질 저하의 원인으로 이해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과제를 제시하였다.

이 글에서는 2020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실시한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국민 인식 및 가치관 조사’의 자료를 활용하여 인구 현상에 관한 국민들의 인식을 다각도로 살펴보고 인구 현상의 변화와 관련된 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더불어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고자 한다.

2. 인구 현상 및 대응에 대한 인식

가. 인구 동향

한국 사회는 2000년대 이후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최근 출생아보다 사망자가 많은 인구의 자연 감소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고, 베이비붐 세대의 진입으로 인구 고령화 현상이 더욱 심화되면서 한 사회를 지탱하는 유소년 인구와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고 있다. 초저출산과 심각한 인구 고령화로 인해 인구 피라미

드는 종형에서 역삼각형 모형으로 변화하는 추세이다. 출생아 수는 꾸준히 감소하는 반면, 사망자 수는 고령인구의 증가로 인해 비교적 완만하게 증가하고 있어 인구 규모의 감소 수준은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정부는 급격한 인구 변동 현상의 심각성을 인지한 2006년부터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통해 출생아 수의 감소와 이로 인한 인구구조의 변화에 본격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변수정, 황남희, 2018). 2019년 합계출산율(Total Fertility Rate; TFR)이 0.92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한 이후 초저출산은 고착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출생아 수 감소는 고령인구 증가와 맞물려 총 인구 감소에 직접적인 영향 요인으로 작용한다.

지난 15년간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²⁾은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에 의거하여 인구 변동을 초래하는 근본 원인과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완화적 접근 방식을 중심으로 추진하였다(강은나, 2016; 이소영, 이윤경, 김세진, 2019; 이윤경 외, 2020). 그러나 출산율 회복을 통한 완화 전략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저출산 중심의 흐름은 가속화되었고, 전체 인구에서 고령인구의 비율이 높아지는 고령화율의 변화와 절대적인 고령인구의 규모 증가가 동시에 발현함으로써 인구구조의 가시적인 변화가 확인되었다(이윤경, 2021).

더욱이 생산가능인구 감소로 인한 경제성장 둔화, 고령인구 증가로 인한 생산성 감소와 부양 부담 증가 등 총부양비의 증가로 개인과 국가의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에 도달했다(이소영, 이윤경, 김세진, 2019). 최근 ‘완화(Mitigation)’와 ‘적응(Adaptation)’의 두 축을 통해 급격한 인구 변동에 정책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틀을 마련하였고, 이러한 정책적 기초를 유지하며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21~2025)’을 수립하였다.

이러한 인구구조의 변화는 사회제도와 정책(거시), 사회적 인식과 가치관(미시) 등 사회 전반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되며, 그 사회경제적 파급 효과에 대한 사회적 우려도 점차 확대되고 있어 또 다른 ‘사회적 위기’로 인식되고 있다. 그럼에도 인구 변동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과 가치관을 파악하는 것은 인구 현상에 대한 공감대와 사회적 연대 의식, 정책에 대한 사회적 동의 고취를 위해 필요한 과정이며, 연일 언론을 통해 인구 감소에 관한 보도가 발표되는 현시점에서 인구 현상에 관한 국민들의 인식을 종합적으로 조명해 볼 필요가 있다.

나. 인구구조의 변화와 인구 감소

출생아 수 감소와 고령인구 증가로 인한 인구구조의 변화는 출산과 사망, 국제이동과 같은 인구

2)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은 저출산 및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급격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중장기적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정부 정책의 구체적인 실행 계획으로 5년 주기로 수립됨. 2018년 ‘저출산·고령사회 로드맵’을 통해 출산 장려 대신 삶의 질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이 논의되었고, 인구 변동과 관련하여 인구 ‘완화’와 ‘적응’ 측면에서 패러다임의 변화와 정책적 틀을 마련할 수 있게 됨(변수정, 황남희, 2018; 이소영, 이윤경, 김세진, 2019; 이윤경 외, 2020; 이윤경, 2021).

변동 요인과 연관된다(우해봉, 신화연, 박인화, 김선희, 2014). 2020년 조사를 통해 인구 변화가 우리 사회에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영역 1순위를 살펴본 결과, ‘사회보장 부담 증가’(42.2%)와 ‘노동력 부족으로 인한 경제성장 둔화’(31.8%)를 꼽은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그 외 ‘국방력 약화’(8.2%), ‘세대 간 사회갈등 증가’(6.4%), ‘인구 감소로 인한 지역 위기’(6.2%) 순으로 높은 응답을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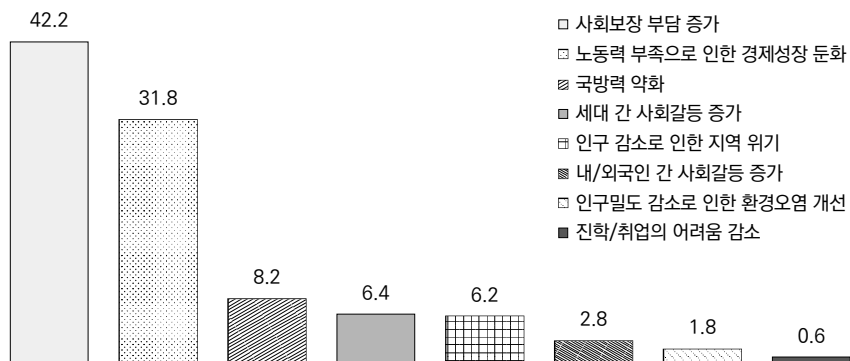
인구 변동은 강력하고 광범위한 파급효과가 예상되며, 그 중에서도 인구 감소는 장기간 지속된 저출산 현상으로 인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우해봉, 한정림, 2018; 이윤경, 2021). 특히 한국 사회에서 관측되는 인구 감소는 고령인구 증가(인구 고령화) 현상과 동시에 진행되어 정책적 대응 또한 쉽지 않다(Coleman & Rowthorn,

2011; 우해봉, 한정림, 2018 재인용). 지금까지 한국 사회의 급격한 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범정부 차원에서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수립 및 추진하는 등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지만, 관련 정책의 실효성에 대하여 끊임없는 비판을 받고 있다. 더욱이 한국 사회의 인구 감소 현상은 이미 예견된 문제임에도 그 속도가 예상치를 뛰어넘고 있으며, 향후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어 지속적으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2020년 조사 결과에 의하면, 국민들이 인구 감소 현상을 ‘사회적 문제(다소 문제이다+매우 문제이다)’로 인식하는 비율은 94.1%로 ‘사회적 문제가 아니다(전혀 문제가 아니다+별로 문제가 아니다)’라고 인식하는 비율인 5.9%에 비해 매우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경향은 출생아 수 감소와 고령인구 증가 현상, 새롭게 주목하는 수도

그림 1. 인구 변화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 1순위

(단위: %)



주: 1) 전체 응답자 8,000명을 대상으로 함.

2) 기타 0.0% (고령인구 일자리 수 부족으로 빈곤이 가속화 1건)

자료: 이윤경 외. (2020).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국민 인식 및 가치관 심층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표 4-1> 재구성.

표 1. 인구 현상별 사회유형에 대한 문제 인식

(단위: %)

특성	사회적 문제 인식				계(명)
	전혀 문제가 아니다	별로 문제가 아니다	다소 문제이다	매우 문제이다	
전체(인구 규모 감소) ¹⁾	0.4	5.5	60.7	33.4	100.0(8,000)
출생아 수 감소	0.3	5.2	48.9	45.5	100.0(8,000)
고령인구 증가	0.6	8.2	57.5	33.7	100.0(8,000)
수도권의 인구 집중화	0.3	7.0	62.8	29.9	100.0(8,000)

주: 1) 전체 응답자 8,000명을 대상으로 함.

자료: 이윤경 외. (2020).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국민 인식 및 가치관 심층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표 4-2>~<표 4-15> 재구성.

권 인구 집중화 현상의 결과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났다. 이 글에서는 인구 감소 현상을 크게 출생아 수 감소와 고령인구 증가(저출산·고령화 현상), 수도권 인구 집중화로 구분하여 한국 사회의 인구 감소 현상에 관한 국민들의 인식을 살펴보았다.

인구 현상을 사회적 문제로 심각하게 인식하는 비율은 출생아 수 감소, 인구 규모의 감소, 수도권의 인구 집중화, 고령인구 증가 순으로 높게 나타났고, 대체로 90.0% 이상의 높은 비율을 보였다. 특히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한 2018년과 2019년 국민 인식조사에서는 응답자의 86.8%와 87.0%가 출생아 수 감소(저출산 현상)를 사회 문제로서 심각하다고 인식하였고, 응답자의 92.7%와 91.0%가 고령인구 증가(인구 고령화 현상)를, 응답자의 85.9%와 87.1%가 인구 감소 현상을 사회문제로 심각하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변수정, 이소영, 이윤경, 조성호, 김세진, 2018; 김은정, 박종서, 변수정, 주보혜, 김세진, 2019). 2020년 조사에서 한국 사회의 인구 현상을 사회

문제로서 심각하게 인식하는 비율은 출생아 수 감소(저출산 현상)와 인구 규모 감소 측면에서 증가하였고, 고령인구 증가(인구 고령화 현상) 측면은 유사한 결과로 나타났다. 수도권의 인구 집중화 현상은 본 조사에 새롭게 추가된 문항으로, 이전 조사와의 변화 추이를 확인하기 어려웠다.

1) 사회적 문제와 본인의 삶에 미치는 영향 정도 인식

한국 사회의 출생아 수 감소 현상(저출산 현상)을 '사회적 문제'로 인식하는 비율은 94.5%로, '사회적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비율(5.5%)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인구사회학적 특성별로 살펴보면, 조사응답자의 연령이 70~79세인 경우 97.7%로 가장 높았고, 사별(97.6%), 1인 가구를 제외한 1세대 가구(96.2%)에서 출생아 수 감소 현상을 '사회적 문제'라고 인식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이와 달리 조사응답자의 연령이 19~29세(10.7%)인 경우와 미혼(9.2%), 2세대 가구(6.1%)인 경우에서 출생아 수 감소 현

상을 '사회적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비친족 가구를 포함한 기타 가구에서 한국 사회의 출생아 수 감소 현상을 '사회적 문제'로 인식하지 않는 비율이 25.2%로 가장 높게 조사되었다. 이는 가족 형태가 변화하고, 연령이 낮을수록 아직 교육제도 내에 있거나 구직의 어려움으로 결혼 및 출산을 미루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 기인하는 것으로 유추된다.

이와 함께 출생아 수 감소 현상이 현재 본인의 삶에 미치는 영향 정도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살펴보았다. 그 결과, 한국 사회의 출생아 수 감소 현상이 현재 본인의 삶에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의견은 14.2%인 반면, 현재 본인의 삶에 영향이 있을 것이라는 의견은 85.8%로 높게 나타났다. 출생아 수 감소 현상이 현재 본인의 삶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하는 비율(다소 영향이 있을 것이다+매우 영향이 있을 것이다)은 전반적으로 약 76.0% 이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인구사회학적 특성별로 살펴보았을 때에도 동일한 경향을 보였다. 조사응답자의 연령이 50~59세(89.5%)인 경우와 법률혼/유배우(87.8%), 비친족 가구를 포함한 기타 가구(96.0%)인 경우에서 출생아 수 감소 현상이 현재 본인의 삶에 미치는 영향 정도를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달리 출생아 수 감소 현상이 현재 본인의 삶에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응답은 조사응답자의 연령이 80세 이상(24.4%)인 경우와 사별(20.5%), 3세대 이상 가구(18.5%)인 경우에서 높은 것으로 조사

되었다.

한편, 고령인구 증가 현상(인구 고령화 현상)을 '사회적 문제'로 인식하는 비율은 91.2%로, '사회적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비율(8.8%)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인구 현상의 또 다른 축인 고령인구 증가 현상을 '사회적 문제'로 인식하는 비율은 전반적으로 88.0% 이상의 높은 응답 경향을 보였다. 조사응답자의 연령이 50~59세(93.3%)인 경우와 동거/사실혼(94.5%), 3세대 이상 가구(92.5%)인 경우에서 고령인구 증가 현상을 '사회적 문제'로 인식하는 비율이 높았다. 이와 달리 고령인구 증가 현상을 '사회적 문제'로 인식하지 않는 비율은 조사응답자의 연령이 80세 이상(10.5%)인 경우와 미혼(10.3%), 비친족 가구를 포함한 기타 가구(11.2%)인 경우에서 응답 비율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홀로 신체적으로 독립적인 생활이 어려운 연령에 도달하거나, 배우자와 함께 살지 않는 경우 자녀 또는 지인 등과 가구를 합치는 경향이 증가하는 결과로 해석된다. 특히 1인 가구의 응답이 기타 가구 다음으로 높다는 점에 주목하여, 홀로 가구를 형성한 1인 가구의 특성을 이해하고 가구 형태의 변화에 따른 사회적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논의가 필요하다.

한국 사회의 고령인구 증가 현상이 현재 본인의 삶에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의견은 12.3%인 반면, 현재 본인의 삶에 영향이 있을 것이라는 의견은 87.7%로 높게 나타났다. 고령인구 증가 현상이 현재 본인의 삶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

각하는 비율(다소 영향이 있을 것이다+매우 영향이 있을 것이다)은 약 80.0% 이상으로 높게 나타났다으며, 출생아 수 감소 현상과 마찬가지로 인구사회학적 특성별로 동일한 경향을 보였다. 조사응답자의 연령이 50~59세(89.7%)인 경우와 동거/사실혼(90.6%), 2세대 가구 및 기타 가구인 경우(88.8%)에서 고령인구 증가 현상이 현재 본인의 삶에 미치는 영향 정도를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달리 고령인구 증가 현상이 현재 본인의 삶에 영향을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비율은 조사응답자의 연령이 80세 이상(19.9%)인 경우와 사별(16.4%), 1인 가구(15.6%)인 경우에서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종합해보면, 출생아 수 감소와 고령인구 증가 현상 모두 현재 본인의 삶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

표 2. 출생아 수 감소와 고령인구 증가에 관한 사회적 문제 인식

(단위: %)

구분	출생아 수 감소				고령인구 증가				계(명)	
	전혀 문제가 아니다	별로 문제가 아니다	다소 문제이다	매우 문제이다	전혀 문제가 아니다	별로 문제가 아니다	다소 문제이다	매우 문제이다		
전체	0.3	5.2	48.9	45.5	0.6	8.2	57.5	33.7	100.0(8,000)	
연령*** ($\chi^2=193.658^{***}$) ($\chi^2=46.167^{***}$)	19~29세	0.7	10.0	53.0	36.3	0.4	9.6	59.6	30.4	100.0(1,360)
	30~39세	0.4	7.3	50.7	41.6	0.5	8.4	57.1	33.9	100.0(1,279)
	40~49세	0.3	5.6	49.8	44.3	0.8	7.2	58.6	33.3	100.0(1,533)
	50~59세	0.2	2.4	47.7	49.6	0.3	6.4	56.8	36.5	100.0(1,590)
	60~69세	0.2	3.1	44.4	52.3	0.3	10.0	54.8	34.8	100.0(1,204)
	70~79세	0.0	2.3	45.9	51.8	0.4	8.2	58.2	33.2	100.0(675)
	80세 이상	0.3	2.9	50.0	46.8	2.0	8.5	56.8	32.6	100.0(360)
혼인 상태*** ($\chi^2=107.814^{***}$) ($\chi^2=43.762^{***}$)	미혼	0.5	8.6	52.0	38.8	0.4	9.9	58.4	31.3	100.0(1,886)
	동거/사실혼	0.2	3.7	47.2	48.9	0.5	5.0	58.0	36.4	100.0(1,248)
	법률혼(유배우)	0.2	4.5	49.0	46.3	0.5	8.5	57.4	33.6	100.0(3,932)
	이혼/별거	0.6	7.0	42.0	50.4	0.0	10.2	50.3	39.6	100.0(280)
가구 형태 ($\chi^2=46.714^{***}$) ($\chi^2=9.287$)	사별	0.3	2.1	45.9	51.7	1.2	7.2	57.5	34.1	100.0(654)
	1인 가구	0.3	5.3	46.5	47.9	0.7	9.0	58.1	32.2	100.0(1,499)
	1세대 가구	0.1	3.7	46.5	49.7	0.7	8.5	57.1	33.7	100.0(1,701)
	2세대 가구	0.4	5.7	50.9	43.0	0.4	7.9	57.7	34.0	100.0(4,605)
	3세대 이상 가구	0.7	4.7	44.6	50.0	0.7	6.9	51.8	40.7	100.0(184)
기타	0.0	25.2	24.0	50.8	0.0	11.2	54.0	34.9	100.0(12)	

주: 1) 전체 응답자 8,000명을 대상으로 함.
 2) * p < 0.05, ** p < 0.01, *** p < 0.001
 3) 가구 형태는 출생아 수 감소와 고령인구 증가의 유의성에 차이가 확인되어 첨자도 제시하지 않음.
 4) 카이스퀘어 검정값은 출생아 수 감소, 고령인구 증가 순임.
 자료: 이윤경 외. (2020).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국민 인식 및 가치관 심층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표 4-2>~<표 4-6> 재구성.

표 3. 출생아 수 감소와 고령인구 증가가 본인의 삶에 미치는 영향 정도에 대한 인식

(단위: %)

구분	출생아 수 감소				고령인구 증가				계(명)	
	전혀 영향이 없을 것이다	거의 영향이 없을 것이다	다소 영향이 있을 것이다	매우 영향이 있을 것이다	전혀 영향이 없을 것이다	거의 영향이 없을 것이다	다소 영향이 있을 것이다	매우 영향이 있을 것이다		
전체	1.1	13.1	60.3	25.5	0.7	11.6	63.6	24.1	100.0(8,000)	
연령*** ($\chi^2=94.054^{***}$) ($\chi^2=60.448^{***}$)	19~29세	1.1	15.5	59.9	23.5	0.4	12.7	62.9	24.0	100.0(1,360)
	30~39세	1.0	14.4	58.8	25.8	0.9	11.4	62.6	25.1	100.0(1,279)
	40~49세	1.1	10.5	62.1	26.4	0.4	10.8	63.9	24.9	100.0(1,533)
	50~59세	0.7	9.8	61.8	27.8	0.8	9.4	65.0	24.7	100.0(1,590)
	60~69세	0.8	12.4	62.0	24.8	0.4	10.7	66.4	22.4	100.0(1,204)
	70~79세	1.0	17.0	58.0	24.0	0.7	15.6	62.0	21.8	100.0(675)
80세 이상	3.6	20.9	51.3	24.2	2.6	17.3	55.7	24.4	100.0(360)	
혼인 상태*** ($\chi^2=67.28^{***}$) ($\chi^2=52.487^{***}$)	미혼	1.5	15.4	60.0	23.0	0.5	13.4	62.7	23.3	100.0(1,886)
	동거/사실혼	1.3	11.1	60.7	26.9	1.0	8.4	65.0	25.6	100.0(1,248)
	법률혼(유배우)	0.6	11.5	61.1	26.8	0.5	11.2	63.6	24.6	100.0(3,932)
	이혼/별거	0.5	16.5	58.2	24.8	0.4	12.2	68.5	18.9	100.0(280)
가구 형태** ($\chi^2=31.941^{**}$) ($\chi^2=26.727^{**}$)	사별	2.4	18.1	56.4	23.2	1.6	14.8	61.1	22.5	100.0(654)
	1인 가구	1.4	16.4	59.0	23.2	0.7	14.8	61.9	22.5	100.0(1,499)
	1세대 가구	0.9	13.2	59.4	26.5	0.8	11.6	64.4	23.3	100.0(1,701)
	2세대 가구	0.9	11.9	61.2	25.9	0.7	10.5	64.1	24.7	100.0(4,605)
	3세대 이상 가구	1.6	16.9	56.7	24.8	0.3	13.5	58.4	27.8	100.0(184)
기타	0.0	4.0	53.3	42.7	0.0	11.2	67.9	20.9	100.0(12)	

주: 1) 전체 응답자 8,000명을 대상으로 함.

2) * p < 0.05, ** p < 0.01, *** p < 0.001

3) 카이스퀘어 검정값은 출생아 수 감소, 고령인구 증가 순임.

자료: 이윤경 외. (2020).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국민 인식 및 가치관 심층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표 4-3>~<표 4-7> 재구성.

고, 세부적으로 출생아 수 감소 현상보다 고령인구 증가 현상에서 다소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2) 인구 현상의 정책 효과성과 우선순위

한국 사회는 결혼과 출산의 연결고리가 매우 강한 편으로, 급격한 인구 절벽에 대응하기 위해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토대로 거시적 차

원에서 구조적인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김종훈, 2018; 변수정, 황남희, 2018). 특히 급속한 경제 성장 중심의 발전 전략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형성된 각종 제도들은 개인과 사회, 삶에 대한 가치 등을 비롯해 인구 변동의 요소가 되는 가족 형성과 자녀 출산, 양육 등 개인의 결정과 상호작용을 한다(이윤경, 2021).

최근 정책의 효과성 제고 및 증가 기반 정책 수립을 위해 평가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다. 5년 주기로 수립된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 의해 매년 관련 부처와 지자체에서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추진 및 평가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지만(이윤경, 2021), 정책 평가는 정책 및 사업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가 정책 대상자들에게 미친 효과를 객관적이고 실증적으로 검토하는 과정으로, 관련 성과는 중장기적으로 발현된다(Nachmaias, 1979; 이아영, 안영, 임완섭, 2020 재인용). 한국 사회가 직면한 인구 감소 현상에 관한 정책의 효과성을 진단하고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정책의 우선순위를 점검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실시한 2020년 조사 결과에 의하면, 출생아 수 감소와 고령인구 증가 현상에 대한 정부의 대응 정책이 효과성을 보이는지에 관한 응답은 서로 상반된 양상을 보였다.

첫째, 출생아 수 감소 현상의 완화를 위한 정부의 대응 정책으로 대표적인 것은 다자녀 가구 지원 정책과 아동수당 등이다. 이러한 정책이 출생아 수 감소 현상의 완화를 위해 ‘효과가 있다(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매우 효과가 있다)’는 긍정적인 응답은 56.5%, ‘효과가 없다(전혀 효과가 없다+별로 효과가 없다)’는 부정적인 응답은 43.5%로, 부정적인 응답이 긍정적인 응답에 비해 13.0%포인트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최근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로드맵(2018)을 통해 정책 패러다임이 출산율 제고에서 삶의 질 개선으로 전환되었고, 다양한 형태로 저출산 정책이 추

진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향후 출생아 수 감소 현상의 완화를 위해 국민들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정책은 무엇인지 살펴보았다. 그 결과 출생아 수 감소 현상의 완화를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 1순위로, ‘청년들의 결혼 기피 및 지연의 원인 해소’(37.1%)와 ‘일·가정 양립이 가능한 근로 환경 및 문화 조성’(25.6%) 정책을 택한 응답 비율이 높았고, ‘출산 및 양육 비용 절감’(17.7%)과 ‘육아시설 확충 및 좋은 육아서비스 제공’(14.3%) 정책이 다음으로 높은 응답을 보였다. 특히 ‘법률 결혼 외 다양한 형태의 가족들에 대한 지원’과 ‘가정 및 사회의 성평등’ 정책은 출생아 수 감소 현상의 완화를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으로 응답한 ‘청년들의 결혼 기피 및 지연의 원인 해소’ 정책에 비해 현저히 낮은 약 4.0%의 응답을 보였다.

둘째, 고령인구 증가 현상의 대응을 위한 정부의 대표적인 정책으로는 기초연금과 노인장기요양보험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정책이 고령인구 증가 현상의 대응을 위해 ‘효과가 있다(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매우 효과가 있다)’는 긍정적인 응답은 80.5%, ‘효과가 없다(전혀 효과가 없다+별로 효과가 없다)’는 부정적인 응답은 19.5%로, 부정적인 응답이 긍정적인 응답에 비해 61.0%포인트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조사응답자의 연령이 높을수록(80세 이상 85.7%), 그리고 동거/사실혼(84.9%), 1인 가구(82.5%)의 경우 고령인구 증가 현상을 위한 정부의 대응 정책이 효과적이라는 긍정적인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이와 함께 향후 고령인구 증가 현상을 위해 가장

표 4. 출생아 수 감소와 고령인구 증가에 관한 정부 정책의 효과성 비교

(단위: %)

구분	출생아 수 감소				고령인구 증가				계(명)	
	전혀 효과가 없다	별로 효과가 없다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	매우 효과가 있다	전혀 효과가 없다	별로 효과가 없다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	매우 효과가 있다		
전체	4.8	38.7	49.4	7.1	1.5	18.0	69.2	11.3	100.0(8,000)	
연령*** ($\chi^2=101.041^{***}$) ($\chi^2=171.206^{***}$)	19~29세	6.7	41.5	46.8	5.1	1.9	20.8	69.1	8.2	100.0(1,360)
	30~39세	6.7	39.7	47.8	5.7	1.6	20.1	70.5	7.7	100.0(1,279)
	40~49세	4.5	41.7	45.9	7.9	1.4	18.5	70.5	9.7	100.0(1,533)
	50~59세	3.8	38.7	49.6	7.9	1.4	17.3	71.0	10.3	100.0(1,590)
	60~69세	4.9	36.8	50.5	7.8	1.1	16.1	69.3	13.6	100.0(1,204)
	70~79세	1.9	32.5	58.0	7.7	1.3	15.5	65.7	17.5	100.0(675)
	80세 이상	2.7	29.6	59.3	8.5	1.7	12.6	58.6	27.1	100.0(360)
혼인 상태*** ($\chi^2=76.999^{***}$) ($\chi^2=117.398^{***}$)	미혼	6.2	41.8	47.1	4.9	1.8	20.4	69.8	8.0	100.0(1,886)
	동거/사실혼	4.6	35.3	51.8	8.2	1.6	13.5	73.1	11.8	100.0(1,248)
	법률혼(유배우)	4.9	39.8	47.8	7.6	1.2	19.3	68.2	11.4	100.0(3,932)
	이혼/별거	3.4	36.2	52.2	8.1	0.8	16.1	74.1	9.0	100.0(280)
가구 형태*** ($\chi^2=60.291^{***}$) ($\chi^2=66.678^{***}$)	사별	2.0	30.8	59.9	7.3	2.4	13.0	64.2	20.4	100.0(654)
	1인 가구	3.6	33.5	55.4	7.5	1.9	15.7	68.1	14.4	100.0(1,499)
	1세대 가구	4.3	35.9	51.9	7.9	1.5	17.3	66.8	14.3	100.0(1,701)
	2세대 가구	5.3	41.2	46.8	6.6	1.3	19.0	70.7	9.0	100.0(4,605)
	3세대 이상 가구	7.6	43.5	42.5	6.4	2.8	17.4	65.6	14.2	100.0(184)
기타	0.0	43.2	37.1	19.6	0.0	28.1	51.9	20.0	100.0(12)	

주: 1) 전체 응답자 8,000명을 대상으로 함.

2) * p < 0.05, ** p < 0.01, *** p < 0.001

3) 카이스퀘어 검정값은 출생아 수 감소, 고령인구 증가 순임.

자료: 이윤경 외. (2020).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국민 인식 및 가치관 심층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표 4-4>~<표 4-8> 재구성.

필요한 정책은 무엇인지 살펴본 결과, 고령인구 증가 현상의 대응을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 1순위로 ‘노후 소득보장’(39.3%)과 ‘노년기 의료보장’(20.2%) 지원 정책을 꼽았고, ‘고령자 고용지원’(13.5%)과 ‘노년기 돌봄’(12.8%) 정책이 다음으로 높은 응답을 보였다. 노인의 ‘안전한 생활을 위한 환경조성’ 정책과 ‘여가활동 지원’ 정책은 ‘노년기 소득보장과 의료보장’ 정책 등에 비해 다

소 낮은 6.2%의 동일한 응답을 보였다.

3) 생애주기별 돌봄과 소득보장을 위한 책임 분담

정책의 효과성과 우선순위 문항의 연장선에서 향후 생애주기별 돌봄과 소득보장을 위한 주체별 책임 분담에 관하여 국민들의 인식을 추가로 살펴해보았다. 전 생애주기별로 개인의 생활과 밀접

표 5. 돌봄(아동과 노인), 소득보장(청년과 노인)의 주체별 책임 분담 비교

(단위: 점)

구분		책임 분담			
		정부	가족	기업	개인
돌봄	아동	3.5	2.1	2.4	2.0
	노인	3.8	1.8	2.5	1.9
소득보장	청년	3.2	2.6	1.7	2.6
	노인	3.8	2.1	1.9	2.2

주: 1) 전체 응답자 8,000명을 대상으로 함.

자료: 이윤경 외. (2020).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국민 인식 및 가치관 심층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표 4-10>-<표 4-13> 재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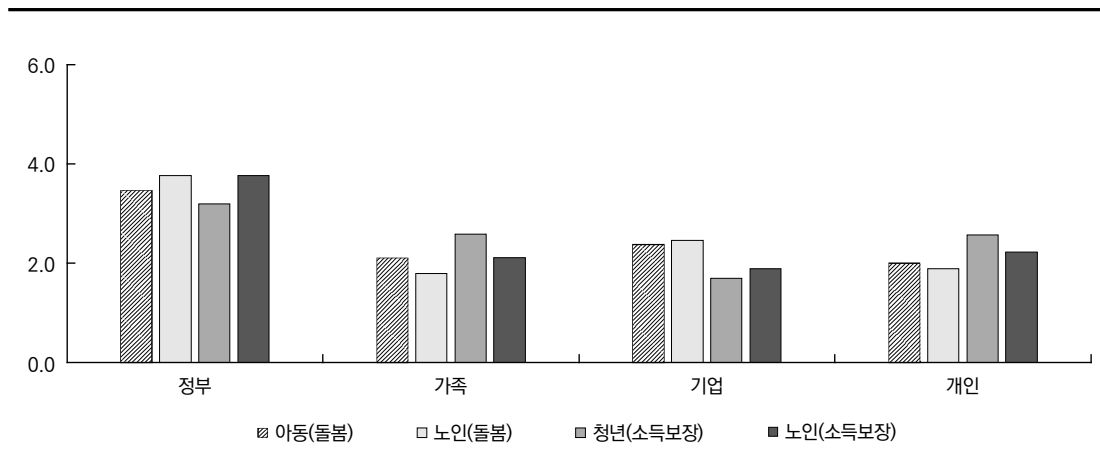
히 연관되는 돌봄과 소득보장 영역을 선정하여, 생애주기별 돌봄과 소득보장을 위한 개인과 가족, 기업과 정부의 책임 분담 비율의 합이 10점이 되도록 구성한 후, 각 영역별로 비교한 결과를 제시하였다.

2020년 조사 결과에 의하면, 돌봄 및 소득보

장의 모든 문항에서 '정부'의 책임 분담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하지만, 돌봄과 소득보장을 구분하여 살펴보았을 때 정부를 제외한 주체별 책임 분담에 대한 응답이 다소 상이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아동과 노인 돌봄의 경우 정부 다음으로 가족의 책임 분담이 높게 나타났고, 청년과 노인 소

그림 2. 돌봄(아동과 노인), 소득보장(청년과 노인)의 주체별 책임 분담 비교

(단위: 점)



주: 1) 전체 응답자 8,000명을 대상으로 함.

자료: 이윤경 외. (2020).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국민 인식 및 가치관 심층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표 4-10>-<표 4-13> 재구성.

득보장의 경우에는 기업과 개인의 책임 분담이 비슷하게 나타났다.

돌봄과 소득보장의 영역에 관계없이 생애주기 별로 살펴보면, 아동은 정부(3.5점), 기업(2.4점), 가족(2.1점), 개인(2.0점) 순으로, 청년은 정부(3.2점), 가족과 개인(2.6점), 기업(1.7점) 순으로 응답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노인 돌봄과 소득보장의 응답을 비교한 결과에 의하면, 노인 돌봄은 정부(3.8점), 기업(2.5점), 개인(1.9점), 가족(1.8점) 순으로 책임을 분담해야 한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노후소득보장은 정부(3.8점), 개인(2.2점), 가족(2.1점), 기업(1.9점) 순으로 책임을 분담해야 한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정부'가 돌봄과 소득보장의 책임을 분담해야 한다는 응답은 영역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높았고, 그 외 '기업'의 응답 비율은 돌봄에 비해 소득보장에서 다소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 인구 규모와 지역 간 분포

최근 인구구조의 변화와 함께 수도권인구 집중화 현상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결혼과 출산이 필수로 여겨지던 과거와 달리, 결혼을 기피하거나 연기하려는 젊은 세대들이 증가하고 각종 시설이 갖춰진 지역으로 이동하면서 인구 불균형이 발생한다. 젊은 세대들의 농촌 이탈과 도시화 경향이 뚜렷해지고, 지방의 경우 인구 유입보다는 유출이 누적되면서 심각한 지역 쇠퇴와 지속가능성 위기에 직면해있다(이윤경

외, 2020). 더불어 지방인구 소멸과 수도권 인구 과밀화의 상반된 경향에 관한 대응방안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면서 더욱 중요해진 영역이다.

2020년 조사 결과에 의하면, 수도권으로 인구가 집중되는 현상을 '사회적 문제'라고 생각하는 비율(다소 문제이다+매우 문제이다)은 인구 감소 현상과 마찬가지로 약 90.0%의 높은 수치를 보였다. 특히 조사응답자의 연령이 60~69세(94.7%)인 경우와 동거/사실혼(94.7%), 1인 가구를 제외한 1세대 가구(94.6%)인 경우에서 수도권으로 인구가 집중되는 현상을 심각하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때 가구 형태에서 1인 가구의 비율이 92.3%로 1세대 가구 다음으로 높은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한편, 수도권인구 집중화 현상이 '사회적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비율(전혀 문제가 아니다+별로 문제가 아니다)은 조사응답자의 연령이 19~29세(11.7%)인 경우와 미혼(10.4%), 1인 가구를 제외한 1세대 가구(17.0%)인 경우에서 높은 경향을 보였다. 즉, 한국 사회의 인구 감소 현상과 더불어 수도권인구 집중화 현상에 관해 '사회적 문제'로 인식하는 정도는 인구사회학적 특성별로 상반된 결과를 보였다.

일자리와 산업 구조의 변화에 따른 지역별 이동이 활발해지면서 2000년대 이후 감소하던 수도권의 전입 규모는 다시 증가하고 있다. 2020년에 수도권 인구가 전체 인구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여 비수도권 인구를 넘어설 것이라는 통계청(2020)의 전망처럼 전체 인구를 기준으로 수도

표 6. 수도권 인구 집중화 현상에 관한 사회적 문제 인식

(단위: %)

구분	수도권의 인구 집중화 현상				계(명)	
	전혀 문제가 아니다	별로 문제가 아니다	다소 문제이다	매우 문제이다		
전체	0.3	7.0	62.8	29.9	100.0(8,000)	
연령*** ($\chi^2=71.296^{***}$)	19~29세	0.4	11.2	61.7	26.6	100.0(1,360)
	30~39세	0.5	6.7	64.8	28.0	100.0(1,279)
	40~49세	0.4	6.4	65.0	28.2	100.0(1,533)
	50~59세	0.3	6.0	62.1	31.6	100.0(1,590)
	60~69세	0.2	5.1	60.8	34.0	100.0(1,204)
	70~79세	0.0	6.1	61.7	32.2	100.0(675)
	80세 이상	0.2	6.6	62.3	30.8	100.0(360)
혼인 상태*** ($\chi^2=265.91^{***}$)	미혼	0.6	9.7	61.4	28.2	100.0(1,886)
	동거/사실혼	0.5	4.8	63.5	31.2	100.0(1,248)
	법률혼(유배우)	0.2	6.4	63.5	29.9	100.0(3,932)
	이혼/별거	0.0	5.7	65.2	29.1	100.0(280)
	사별	0.1	7.2	60.1	32.6	100.0(654)
가구 형태* ($\chi^2=25.296^*$)	1인 가구	0.6	7.1	60.5	31.9	100.0(1,499)
	1세대 가구	0.1	5.3	62.5	32.0	100.0(1,701)
	2세대 가구	0.3	7.4	63.6	28.6	100.0(4,605)
	3세대 이상 가구	0.7	8.5	65.4	25.4	100.0(184)
	기타	0.0	17.0	48.6	34.4	100.0(12)

주: 1) 전체 응답자 8,000명을 대상으로 함.

2) * $p < 0.05$, ** $p < 0.01$, *** $p < 0.001$

자료: 이윤경 외. (2020).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국민 인식 및 가치관 심층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표 4-15> 재구성.

권은 인구 집중이 심화되고, 지방은 인구 감소와 고령화가 심화되어 인적 기반이 약화되는 등 지역별로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처럼 인구 고령화로 인한 지방인구 소멸과 수도권 인구 과밀화의 상반된 경향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으며 지역별로 매우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이를 토대로 인구 감소와 수도권의 인구 집중화 현상에 관한 국민들의 인식 차이를 면밀히 검토하고자 교차분석을 추가로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인

구구조 변화에 따른 수도권의 인구 집중화 현상에 관해 ‘사회적 문제’로 인식하는 경향이 비교적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인구 감소 현상과 수도권의 인구 집중화 현상 모두를 ‘다소 사회적 문제이다’라고 인식하는 비율은 74.1%로, 두 현상을 ‘전혀 사회적 문제가 아니다’라고 인식하는 비율(6.1%)에 비해 약 10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표 7.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사회적 문제 인식 비교

(단위: %, 명)

구분	수도권의 인구 집중화 현상				계(명)
	전혀 문제가 아니다	별로 문제가 아니다	다소 문제이다	매우 문제이다	
전체 ¹⁾	0.3	7.1	63.1	29.5	100.0(8,000)
인구 감소 현상	전혀 문제가 아니다	6.1	33.3	48.5	100.0(33)
	별로 문제가 아니다	1.8	36.1	53.2	100.0(438)
	다소 문제이다	0.2	6.4	74.1	100.0(4,857)
	매우 문제이다	0.1	3.3	45.0	100.0(2,672)

주: 1) 전체 응답자 8,000명을 대상으로 함.

자료: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국민 인식 및 가치관 심층조사, (2020).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자료를 이용해 새로 분석한 결과임.

5. 나가며

인구 변동은 사회 구조적 영향에 의한 대표적인 산물이다(이윤경, 2021). 출생아 수의 급격한 감소는 가족 형성과 자녀 출산, 양육 등 개인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며, 도시 지역을 중심으로 인구가 집중되는 사회 구조는 지역 인구의 유출 현상으로 귀결된다. 출생아 수의 감소와 이로 인한 인구 규모의 감소는 개인의 태도/가치관, 사회경제적 환경과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궁극적으로 사회는 다양한 정책을 통해 구조적인 대응을 하게 된다(이소영, 이윤경, 김세진, 2019). 개인과 가족의 삶, 지역 공동체와 사회시스템 모두 인구 변동과 유기적인 관계를 형성하며, 사회 발전 및 개인의 성숙도에 따라 국민들의 가치관과 현실의 괴리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2020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실시한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국민 인식 및 가치관 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사회 전반에 걸쳐 심각한 문

제로 대두되고 있는 급격한 인구 감소 현상에 관한 국민들의 인식 및 가치관을 살펴봄으로써 향후 인구 절벽에 대한 원인과 대응방안을 중심으로 논의하였다.

2020년 조사에서 국민들은 전반적으로 인구 변동에 대해 ‘사회적 문제’로 심각하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출생아 수의 감소와 이로 인한 인구 규모 감소에 대한 인식이 고령인구 증가와 수도권 인구 집중화 현상에 비해 다소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인구 변동이 현재 본인의 삶에 미치는 영향은 출생아 수 감소(저출산 현상)보다 고령인구 증가(인구 고령화 현상)에서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고, 이는 정부에서 수행한 정책들의 효과성에서도 동일한 경향을 보였다. 한편,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인구 감소 현상과 수도권의 인구 집중화 현상 모두를 ‘다소 사회적 문제이다’라고 인식하는 경향이 비교적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조사 결과를 토대로 제시할 향후 인구 정책의 방향성과 정책적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인구 현상에 관한 정부의 정책은 이미 관련 사안이 초태할 파급효과에 대한 공론화가 충분히 이루어져 언론을 통해 사회적 문제로 이슈화되는 빈도가 잦은 편이다. 하지만 인구 변동으로 인한 사회적 파급효과는 여전히 경제적 측면과 사회보장 부담 증가 측면에 논의가 집중되어 있어 향후 인구 변화가 가져올 사회의 다양한 영역에 대한 진단과 공론화가 필요하다(이윤경 외, 2020).

둘째, 2000년대 이후 인구 정책은 출산율 회복을 통한 '완화' 전략을 중심으로 추진되었지만 반등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고, 인구 감소 현상이 오랜 기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인구 변동은 개인과 가족의 선호 및 선택의 결과가 집계(aggregate)되어 표출된 사회현상으로 중립적인 인식에 부합하는 관점을 정립할 필요가 있으며(우해봉, 2017), 이는 최근 발표된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21~2025)'에 인구 규모의 감소와 인구구조의 변화에 대한 '적응' 정책, 지역별 인구 분포 불균형에 대한 '완화' 정책이 장기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인구 정책의 방향, 즉,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전략으로 제시되었다. 인구 변동은 '완화' 전략을 통해 인구 변동의 속도를 늦추는 효과를, '적응' 전략을 통해 인구 변동이 가져올 부정적 파급효과를 긍정적 파급효과로 전환시키는 점을 기대할 수 있다. 따라서 완충적 역할의 두 정책 간 균형을 유지함으로써 인구구조의 변화에 관한 대응방안을 모색하고, 다양한 영역과 연계하여 일련의 원칙 하에 추진될 필

요가 있다(이윤경, 2021).

셋째, 인구를 구성하는 사람 개개인이 안정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방향으로 변화를 유도하되, 인구 고령화와 지역 인구 불균형 현상으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가의 정책적 대응이 요구된다. 출산, 사망, 이동으로 결정되는 인구 변동 현상은 사회 구조적 측면과 더불어 국민들의 인식 및 가치관의 변화와 밀접히 연관된다. 특히 출산 및 결혼은 개인의 선택으로 자유롭게 결정할 사항이지만, 국민들의 의견 수렴을 통해 출산·양육과 관련한 여건을 촘촘히 구축하여 개인 또는 부부가 출산 계획을 세우고 실현하기 위한 자신감을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 2020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실시한 조사 결과에서도 정부의 대응 정책이 효과가 있다는 긍정적인 응답이 다소 높게 나타났고, 돌봄 및 소득보장의 모든 문항에서 정부의 역할이 가장 높게 나타난 점을 고려하면 더욱 정부의 체계적인 역할이 강조된다. 따라서 정부 차원에서 국민들의 인식과 가치관의 변화 추이를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출산·양육 환경을 포함한 관련 여건을 조성한다면 우리 사회의 인구 변동으로 인한 문제는 다소 완화되어, 보다 나은 삶의 질을 영위할 수 있을 것이다. ■

참고문헌

강은나. (2016). 고령사회 삶의 질 제고를 위한

- 정책적 함의. 보건복지포럼, 2016년 2월호(통권 제232호). pp. 29-37.
- 김은정, 박종서, 변수정, 주보혜, 김세진. (2019). 2019년 저출산·고령사회에 대한 국민 인식조사. 세종: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종훈. (2018). 인구정책 및 저출산·고령화 대책 전망. 보건복지포럼, 2018년 1월호(통권 제255호). pp. 61-73.
- 변수정, 이소영, 이윤경, 조성호, 김세진. (2018). 2018년 저출산·고령사회에 대한 국민 인식조사. 세종: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변수정, 황남희. (2018).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과 향후 과제. 보건복지포럼, 2018년 4월호(통권 제258호). pp. 41-61.
- 우해봉, 신화연, 박인화, 김선희. (2014). 인구구조 변화와 복지지출 전망. 서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우해봉. (2017). 인구변동의 국제 동향과 중장기 인구정책 방향. 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우해봉, 한정림. (2018). 저출산과 모멘텀 그리고 한국의 미래 인구변동. 보건사회연구, 38(2). pp. 9-41.
- 이소영, 이윤경, 김세진. (2019).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미래 사회정책 방향과 과제. 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이아영, 안영, 임완섭. (2020). 사회보장 정책 효과성 증진을 위한 평가체계 분석 및 개선 방향-근로빈곤층 대상 정책을 중심으로. 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이윤경, 변수정, 김은정, 진화영, 주보혜, 남궁은하, ... 정윤경. (2020).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국민 인식 및 가치관 심층조사. 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이윤경. (2021). 인구정책 전망과 과제. 보건복지포럼. 2021년 1월호(통권 제291호). pp. 35-45.
- 통계청. (2019). 인구감소 시작, 인구통계로 본 대한민국 인구의 미래. http://sti.kostat.go.kr/window/2019a/main/2019_sum_8.html에서 2021.2.3. 인출.
- 통계청. (2020.6.29.). 최근 20년간 수도권 인구 이동과 향후 인구전망. http://kostat.go.kr/portal/korea/kor_nw/1/1/index.board?bmode=read&aSeq=383417에서 2021.2.25. 인출.
- 행정안전부. (2021.1.4.). 사상 첫 인구감소, 세대수는 사상 최대. 행정안전부 보도자료.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82058에서 2021.1.26. 인출.
- Coleman, D., & Rowthorn, R. (2011). Who's afraid of population decline? A critical examination of its consequences. *Population and Development Review*, 37(Supplement). pp. 217-248.
- Nachmaias, D. (1979). *Public policy evaluation: Approaches and methods*. New York: St. Martin's Press.

Social Awareness of Population Issues and Its Implications

Chin, HwaYoung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With its total fertility rate remaining consistently below 1.3 since 2001, Korea is facing the serious issue of rapid population decline. Using data from the “2020 Survey of Public Perception and Values toward Policy Responses to Low-fertility and Aging Society”, this article examines the perceptions people have of the issue of rapid population decline and discusses what might cause a future demographic cliff and what should be done to prevent it.

Results from the survey revealed that respondents found their lives affected more by the growth of the elderly population than by declining births (low fertility). Respondents also saw policies on the aging population as having more impact on their lives than policies on low fertility. Population decline and population concentration in the metropolitan region were generally perceived as “sort of social problems.”

Based on these results, this article proposes to implement continuous monitoring and review of population changes and to work toward raising the quality of life for people by building, with a balanced policy mix of mitigation and adaptation, the basis for life-cycle care and income support.